

# 大學教授의 職業福祉 : 현실과 이상

金 鍾 一

(建國大 社會福祉學科)

## 1. 글 머리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나의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만고불변의 소리는 “대학교수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이다. 이 말의 속 뜻에는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과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 한량같은 모습에 대한 비아냥이 함께 담겨져 있으리라. 어찌다 내가 교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 등을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이들은 대번에 “팔자 좋은 교수들에게 월급까지 많이 주던 불공평한 것”이라며 ‘한량들에게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를’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교수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한량’으로 남아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내 친구들의 해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 과장을 한다면, 고행과 극기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잘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의 문제는 쳐놓는다고 해도 황망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 대학의 연구 환경을 생각하면 교수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그래서 책 한 권 안 읽고 글 한 줄 쓰지 않으면서 골프로 소일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천국이겠지만, 생활바를 쪼개어 책을 사고 선진국의 학술정보와 적당한 실험시설을 찾아 四時長철을 해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나는 팔자 좋은 직업인으로 남아 있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교수들의 직업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려고 한다.

## 2. 職業福祉에 관한 一般論

사전적인 의미의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는 자기 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신체적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한 각종의 혜택(benefits)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혜택과 서비스에는 물론 임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들(예컨대 의료보험이나 연금 따위)도 이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된 사회에서는 직업복지의 중요성이 강

조될 이유가 별로 없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직업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종업원을 위한 직업복지는 흔히 기업복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복지의 제공 주체가 기업(자본가, 경영자)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던 이윤의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는 기업이 이렇듯 ‘자발적으로’ 加外의 비용을 들여가며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특성상 노동자의 同意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복지의 일차적 목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창출하고 나아가 촉진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복지가 기업주의 ‘음모’에 의해서만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기업복지를 증대시키는 추동력이 되고 있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것은 기업복지의 성격과 내용이 과거에는 최저 생계를 보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던 반면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점차 삶의 질을 넓히는 문제로 초점이 옮겨 가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해 놓은 기업(직업)복지제도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대학의 복지제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LO는 직업복지에 필요한 제도로 다음의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보수(유급휴가, 퇴직수당 등)
- ② 상여금 및 현금 보조(이윤 배당 포함)
- ③ 현물 급여( 각종 생활용품 배급, 기업 재품 할인 제공)
- ④ 주거 지원(임대료 제공, 주택 구입 지원)
- ⑤ 사회보장 지원(법정 사회보장비, 가족수당, 실업수당, 의료비 보조 등)
- ⑥ 직업훈련(교육비 지원, 연수기회 확대 등)
- ⑦ 복지 서비스(식당, 매점, 교육·문화·오락 시설, 협동조합 보조, 저리 용자 등)
- ⑧ 기타 복지제도(통근 지원, 작업복 등)

위의 여덟 가지 가운데 ①항과 ⑤항은 대개

법으로 강제하는 것들이므로 논외로 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대부분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생색을 내기에 좋은 것들(예컨대 식당, 통근차, 오락시설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생활에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이 주거 안정을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움에 따라 주택 문제는 기업복지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의 구성원, 그 중에서도 교수들의 직업복지는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떠해야 하며 그 실상은 어떠한가? 교수도 국가(국립대학)나 개인·재단(사립대학)에 고용되어 일정한 노동(강의와 연구)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廣義의 임금노동자라고 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볼 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졌기에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복지의 내용과 성격도 전문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의 직업복지가 기업주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교수들의 직업복지도 저절로 개선되고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직업복지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3. 우리나라 敎授 職業福祉의 現況

#### 1) 生活環境 측면

맑스가 이미 오래 전에 갈파한 바와 같이 사람은 역사를 만들기 전에 우선 먹고 살아남아야 하는 법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빙혹한 명제는 교수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유교 전통 때문에 선생이 돈 문제, 나아가 생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대단히 천하게 여겨왔다. 이른바 安貧樂道니 무어니 해서 젓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예찬되고 청빈은 학자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다르기 마련이었다. 가난한 선비가 이론적으로는 칭송되었는지 몰라도 실제의 삶에서는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업신여김까지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면 요즘은 어떠한

가? 한마디로 말하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월급이 적다고 속으로 불평은 할지언정 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대부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관목할 만한 성공을 기두고 있는 이 '민주화 시대'에도, 교수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진짜' 소리뿐이다. 교수들의 보수가 만족스럽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머리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에게 내가 받는 월급의 내역을 들려주면 다들 놀라는 표정이다. 그렇게 적은지 몰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 보자.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느 특수은행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의 입행 동기들이 지금은 다 과장이 되었는데 이들이 받는 급여를 연봉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내가 받는 액수의 한 배 반이 넘는다. 더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교수들의 보수는 상위직과 하위직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 직장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게다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는 각종의 복지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실질적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예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교수들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열세일 뿐 아니라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봉급 이외의 수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절대액수 자체가 적은 셈이다.

더욱 회한한 점은 교수의 給與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이름이다.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봉과 연구수당인데, 이 중에 후자를 문자 그대로 연구에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교수들의 가계는 아마도 파산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편법은 결국 稅制上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존재할 터인데 이러한 편법이 아닌 근본적으로 교수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열악한 대학 재정을 고려할 때 급여의 절대수준이 조만간 대폭적으로 상승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실제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반 직장의 경우, 가족수당이나 자녀의 교육비 지급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가족수당은 거개가 이름뿐이고 자녀의 교육비 지급은 전무한 형편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기 대학에 입학한 자녀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전부인데 이 혜택은 마땅히 어느 대학에 가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도 일정한 액수의 학비 보조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계 지출에서 자녀들의 학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남을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지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住居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 노동자들이 엄청난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듯이 많은 교수들, 특히 젊은 교수들의 주거생활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교수의 보수가 적다고는 해도 일반 노동자들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 문제에 이르러 이러한 상대적 우위는 참으로 미미한 것이 되고 만다. 특히 지난 수년간을 해외에서 유학을 하느라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젊은 교수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좌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국가의 주택정책이 크게 잘못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긴 하지만,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생명으로 하는 교수들이 주거 문제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로 시달릴 때 연구와 강의에 대한 열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뻔한 노릇이다. 다른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사원 주택과 주택자금 융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책으로 사용된다. 현실적으로 학교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교원용 주택을 짓거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알선해 주는 일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 발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느덧 호지부 지되고 말았다. 사실 과거에 집값이 안정되어 있을 때보다 주거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 오늘에 그러한 제도가 더욱 필요하고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2) 研究環境 측면

연구환경은 교수 직업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가 적고 다른 혜택이 없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연구환경이 열악한 것은 견디기 힘든 노릇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총을 쥐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싸우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대학들은 총도 주지 않고 전쟁터로 내모는 무모한 짓을 벌써 수십 년째 계속하고 있다. 먼저 講義 부담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대학이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이 9시간 자체도 외국의 대학에 비하면 과중한 것이다. 선진국의 대학교수들은 한 학기에 보통 한 과목(3시간), 많아야 두 과목(6시간) 정도를 맡는다. 그것도 학부 교수와 대학원 전임교수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이 9시간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수들은 주당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18시간을 가르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학원 강사가 다름없다.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지는 않으리라. 특히 한창 연구 의욕이 높은 젊은 교수들이 학교내의 발언권이 약한 탓으로 엄청난 강의 부담에 시달린다. 한 2, 3년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 아무런 의욕도 남아 있지 않게 되고 선배들이 살아 왔던 한량 의 길을 별수없이 걷게 되는 것이다. 강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교수의 직업복지를 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자의 복지가 노동시간의 경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교수의 복지는 강의시간의 경감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강의시간을 줄이려면 물론 더 많은 교수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학과당 교수의 수가 네 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

저 기가 막힐 뿐이다.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치고 이렇게 한심한 대학을 운영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研究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러나 틀을 맞기 전에 좀 따져 보아야 하겠다. 연구는 우선 생각하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강의 부담에 짓눌린 교수들이 학기중에 생각할 틈이 어디 있는가. 참된 연구는 또한 새로운 학술정보의 흐름에 끊임없이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금 선진 외국의 대학들은 전자우편을 통한 학술정보의 교류가 보편화되어 있다. 외국 학자들과 교류를 할라치면 으레 BITNET(전자우편의 일종) 계좌의 번호를 물어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서너 개의 학교만이 이 시스템을, 그것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FAX만 해도 그렇다. 각 학과마다 하나 정도는 설치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서관 시설이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 도서관이란 것이 건물만 번드르하게 지어 놓았을 뿐 교수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심지어 교수들이 도서관에 들락거리면 ‘치신없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귀국후 겪는 첫번째 좌절은 바로 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도서관을 둘러 보면서 시작된다. 장서의 절대 부족도 문제이지만, 질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리고 도서관이 제공해 주는 각양의 서비스에 익숙해 있던 이들은 한국 대학의 도서관이 그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절망에 가까운 좌절을 느끼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란 말인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좌절은 아예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립 서울대학교의 공대 교수들이 적당한 실험 시설이 없어서私营企业의 시설을 밤마다 전전했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그런데 교육기제를 들여오기 위해 아직도 세계은행의 차관을 끌어다 써야 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금메달 하나에 십 억 가까운 돈을 퍼부었다니 어안이 병병할 노릇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대학에서는 수많은 교수들

이 한정된 실험 공간과 시설을 둘러싸고 서로 승강이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부의 예산이 없다는 타령은 고장난 레코드판에서 여전히 돌아 나온다.

이제 研究費 문제를 생각해 보자. 월급에 들어 있는 연구비 아닌 생활비를 연구에 쪼개어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연구비 사정은 어떠한가. 학교마다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얼마의 돈을 정해 놓기는 한다. 그 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신물이 나도록 했던 것이고, 여기서 연구비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겠다. 나는 우선 연공 서열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급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비란 말 그대로 연구하려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상여금의 성격을 지니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연구과제도, 연구 의욕도 없는 사람이 '차레'가 되었다고 연구비를 '타먹는' 현재의 제도는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나쁜 관행이다. 연구비 지급은 경쟁제도에 의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연구하려는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일괄해서 이삼백만 원 가량을 보너스 한번 지급하듯이 할 게 아니라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액수를 면밀히 고려해서 충분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종래의 형식적인 연구비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교수들의 저작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부 연구비의 대중을 이루는 교육부나 과학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선정 과정 자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연을 비롯한 각종 연줄이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작용한다는 소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선정 과정이 공개되고 당락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교수들의 再教育·再充電 기회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시대의 변화가 빠를수록 학문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된다. 더구나 세계의 선진 대학들과 최소한의 보조나마 맞추

려면 끊임없는 인적 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이 필수적이다. 일반 기업들도 민화하는 국제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원들에 대한 연수 및 직업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은 석기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해외연수 기회를 무슨 포상휴가처럼 사용하는 풍토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연구비 지급과 마찬가지로 연공 서열에 의한 선발이 시정되고 연구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연수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른바 교환교수로 외국에 나간 사람이 골프와 낚시로 소일하다 돌아오는 한심한 작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는 이른바 안식년 제도의 정착이다.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놓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의 부담이 많고 연구환경이 열악한 상황일수록 재교육과 재충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식년은 고사하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강의에 지장이 있다고 참석을 불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더구나 자기 돈을 들여 나가는데도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례서는 교수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요 대학의 발전은 요원하다. 단언하건대 대학의 발전없이 선진국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3) 기타 서비스의 문제

교수들이 이 나라 대학 현실에 제아무리 불평이 많아도 그 지나긴 방학을 생각하면 자못 '송구스러울' 지경이다. 하지만 방학도 규정에 따르면 강의만 안할 뿐 업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강의를 쉬는 대신 연구에 전념하라는 뜻일 것이다. 모처럼 조용해진 교정에서 연구와 사색을 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교수라는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이론과 다르다. 여름의 연구실은 그대로 썩통이다. 에어컨을 달 형편도 못되지만, 설사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삼복 더위에 연구실

에 앉아서 땀으로 뺨을 감고 있으면 연구가 아니라 극기훈련에 끌려온 기분이 든다. 겨울 연구실은 솟제 수도마져 끓인다. 우리는 늘 눈빛이나 반딧불 아래에서 주경야독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주눅이 든 탓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커다란 죄책감을 느낀다.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핍계가 많은가. 아무튼 대학의 시설이 형편없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문제를 더 이야기 해보자. 학생들은 그래도 해마다 學自開니 뭐니 해서 나름대로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지만, 교수들은 늘 白面(白面)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연구실이라는 자기공간이 주어져 있는 탓인지 휴식공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적다. 교수회관이 없는 학교도 많다. 지방캠퍼스의 경우, 대학촌마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내에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더구나 체육 시설과 같은 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나는 다른 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이 있거니와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학내 구성원 전체를 위한(굳이 교수 전용일 필요는 없다) 종합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학교내 지위가 높은 일부 교수들이야 콜프라도 즐기겠지만, 강의와 연구에 쫓기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체력 단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내 체육시설이야말로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 일년 내내 강의 한번 들어 오지 않는 체육 특기생들에게 들이는 돈의 일부만 투입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사립대학들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체육 특기생 제도 같이 쓸데없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경영합리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건강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醫療 서비스 문제가 있다. 현재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듯한데 사실은 의외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나아가 양질

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분명히 알아 둘 것은 모든 대학이 거의 예외없이 교수들의 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치료 위주의 제도라는 것이다.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는 대단히 무관심한 제도이다. 정기 건강진단이란 것이 있지만,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좀 괜찮다는 종합병원에 가서 그럴 듯한 건강진단을 한번 받으려면 수십만 원의 돈이 든다. 근본적으로는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직업복지의 차원에서 우선해야 할 일은 체계적인 건강진단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가족들에게도 마땅히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노동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교수의 직업복지는 교수 개인의 수준이 아닌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4. 教授 職業福祉 증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이 글은 체계적인 논문이나 종합보고서가 아니고 평소에 느낀 점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두서없이 적어 본 것이다. 따라서 ‘불평과 불만’은 많아 보여도 무슨 구체적이고 치밀한 문제제기나 대안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그러한 것들은 관계 실무자들이 담당하여야 할 터이고 나로서는 몇 가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생각들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기초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법이다. 원칙에 충실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돈의 문제이다.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經營 合理化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쓸데없는 투자들이 너무 많다. 돈이 없다

는 대학들이 무엇 때문에 체육 특기자를 위해 돈을 쓰고 準프로적인 성격의 스포츠 팀을 운영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 인력의 정비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전산화 확대와 근로 장학생 대체 등의 방법으로 방만한 행정 인력을 줄이던 된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예컨대 기초를 닦는 일에는 동한히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의 초청강연 따위로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대학의 하부구조는 엉망인 채 과연 그런 곳에 돈을 들여야 하는가. 경영 합리화와 아울러 직업복지에 대한 정부 및 학교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직업복지를 위한 투자는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선진 대학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볼 때, 아무리 경영 합리화를 잘 해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타령 또한 그 역사가 오랜 것이라 이제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는 늘 이제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언제까지나 안보를 구실로 나머지 분야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세상이 저토록 바뀌고 있는데 말이다. 국방 예산의 절대액 자체도 줄여야 되겠지만, 군대내의 경영 합리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목적세 신설을 남발하는 대신 기존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 관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기가 명실상부한 국민학교의 의무 교육조치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학교수들의 직업복지 云云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교수들 자신의 權利意識이 뚜렷해

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운명처럼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교수의 직업복지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교당국이나 정부의 시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을 개선하라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教授協議會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교수협의회의 성격이 모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교수협회가 利益團體로서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수협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학생회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학생 대중의 관심을 잃어 버렸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수협회가 너무 젊고 고답적인 단체가 되어서는 교수들의 구체적인 이익은 물론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위상 확보조차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모두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허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교수의 직업복지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제기된 문제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방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先進大學이 없는 선진국은 없다. 그리고 선진 대학은 교수의 직업복지를 확립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학들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